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783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www.krihs.re.kr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이성수 연구위원

주요내용

- 1 베트남은 1986년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개혁개방정책)를 채택하여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했고 2009년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2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위해 정부 및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정비했으며,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의 48%를 교통·통신,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58.4%는 제조업 부문에 유치
- 3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지역 최대 상업항인 하이퐁(Hải Phòng)항을 연결하는 5번 국도 개선사업으로 두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상업·산업생산 능력 증대, 주변의 지역총생산 증가에 기여
- 4 베트남 최대 발전소인 푸미(Phu My)발전소 건설로 북·중·남부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고 남부지역 전력공급의 26%를 담당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지원
- 5 호치민시 인근의 떤투언(Tân Thuận)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輸出加工區)*는 국내·외 투자자금 유치, 제조업 부문 수출역량 강화, 외화수입 창출과 확대에 기여했으며, 푸미흥(Phu My Hung) 택지개발은 주택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개발에 기여

* 주로 개발도상국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정한 자기 나라의 특정 지역

시사점과 정책제언

(시사점)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개발 시기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

- [대내] 헌법 및 각종 법령의 사전 제·개정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 [대외] 미국과의 관계개선 선행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중요
- 소규모의 관리 가능한 경제특구를 먼저 개발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프라로 순차적 개발

정책제언 ①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 추진)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로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 순차적 개발 추진

정책제언 ② (남북한 간 항목별 협력)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한 남북협력방안 제시

- (제도 마련)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남북한 공동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원조달) (가칭) '국제공적자금 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 (인력 양성) 인프라 관리·운영 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력, 국제협력과 시장경제체제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1.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국제협력의 성과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추진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중앙계획 경제방식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추진

- 베트남은 1980년 중반까지 농업부문이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식량은 부족했고, 공업부문은 낙후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구조였음
- 연간 40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침체된 실물경기,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화, 세계경제로의 점진적 진입을 위해 중앙계획 경제방식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도이머이 도입 이후 시장경제화 및 대외관계 추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정책변화 과정을 구분할 수 있음

표 1 도이머이 이후의 시기별 주요 정책 및 대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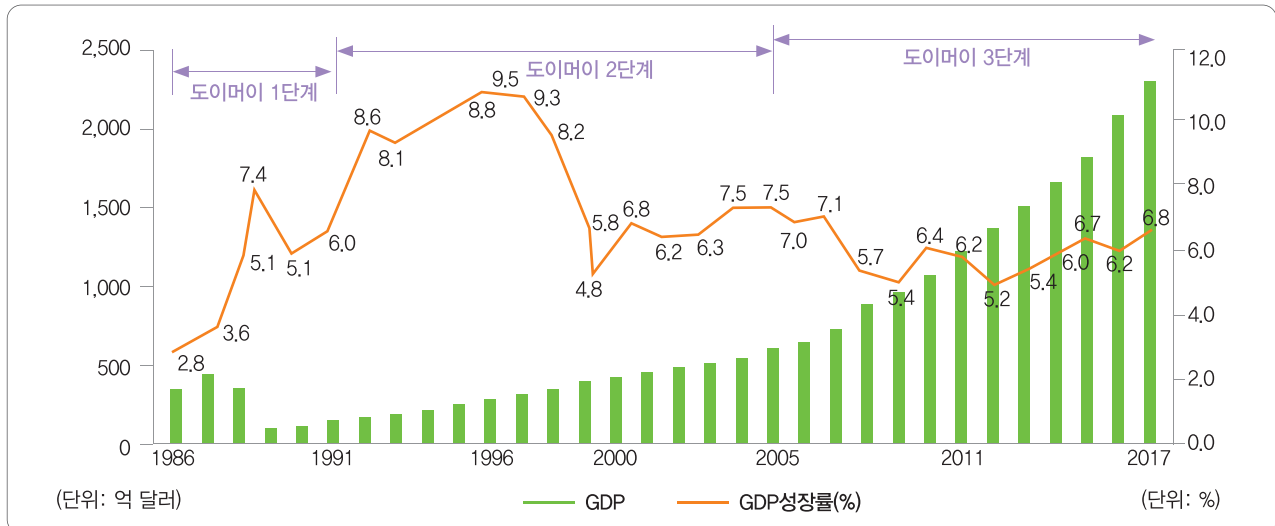
구 분	주요 경제정책	법·제도 제·개정	대외관계
제1기 (1986~1991년)	• 도이머이 도입(1986) •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독점 완화 • 민간 상업은행 허용(1990) • 호치민시 인근에 최초의 수출가공구 설치(1991)	• '외국인투자법' 승인(1987) • '토지법' 개정으로 장기토지사용권 안정성 보장(1988) • '회사법' 및 '개인소유법' 제정(1990)	
제2기 (1992~2005년)	• 국영기업 민영화 시작(1993) • '국가예산법'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세입·세출 책임규정 신설(1996) • 기업 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	• '토지법' 개정(1993) • 경제법원 설립, '노동법' 시행 • 계약과 사회보험 규제 • '기업법'으로 '회사법'과 '개인소유법' 통합(1999)	• 베트남-유럽경제공동체(EEC) 우대무역협정 체결(1992) • 아시아개발은행(ADB), IMF, 세계은행(WB)의 대(對)베트남 자금지원 재개(1993) • ASEAN 가입(1995) • 미국-베트남 쌍무무역협정 체결(2000)
제3기 (2006년~현재)	• 경제구조 조정에 대한 기본계획 착수: 은행, 국영기업, 공공투자에 중점(2013) • 행정절차 검토 및 간소화 프로그램 착수(2014)	• '신(新)기업법'과 '투자법' 개정: 사업규제 철폐의 기반 제공(2014)	• WTO 150번째 공식회원국(2007)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2015) •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현(2016)

출처: 이성수 외 2020, 19(원자료 World Bank 2016, 81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9년 세계은행에서는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베트남의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중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국내총생산의 경우 198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263억 달러에서 2017년 2,238억 달러로 8배 이상 성장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4%씩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
- 대외무역 거래에서는 1987년 국내 무역검문소가 폐지되고 1989년 대외무역에서 정부의 독점 완화와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서 재화의 수출입은 80~90배가량 증가
-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은 16%로 축소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산업 구조 변화가 발생함
- 도시화율은 매년 3%씩 증가하면서 농촌인구는 80%에서 64.3%로 감소하고, 도시 지역에는 전체 인구 9,470만 명의 35.7%를 차지하는 3,380만 명이 거주함

그림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경제성장 추이



출처: <https://databank.worldbank.org/data/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19년 5월 20일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국토인프라의 국제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증가(World Economic Foru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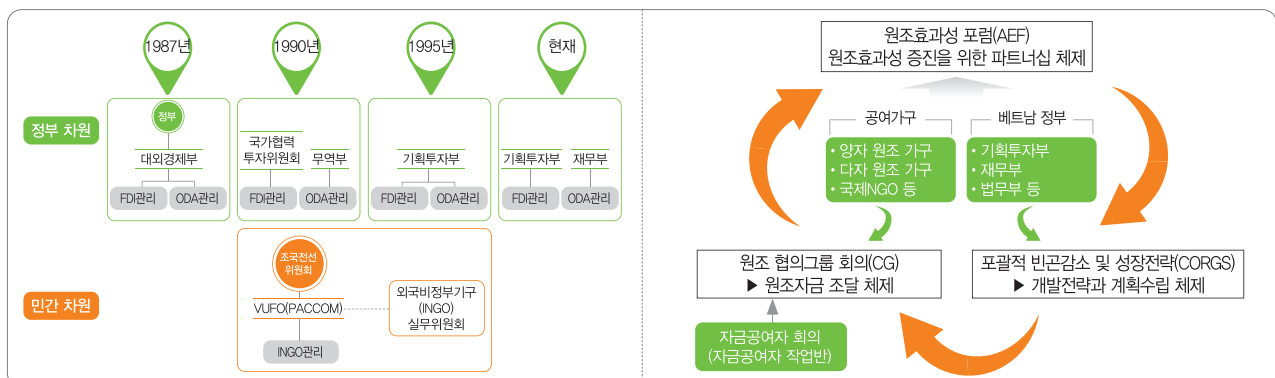
- 베트남의 국토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은 꾸준히 상승
 - 부문별로 변동이 있으나 인프라 종합순위에서는 2007년 93위에서 2018년 75위로 상승

국제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자본 유치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및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대외경제부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 무역부, 1995년에는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 조정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투자부 설립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조직 정비
- 소극적 원조조정에서 국제공여기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자본 운영과 관리에서 효율성 제고

그림 2 국제협력 관리기구의 체계 변화도 및 국제협력 체계도



출처: (좌) Đoàn Văn Minh 2019,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우) 권숙도 2012, 23-28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재작성.

유치된 해외자본은 국토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 1993~2017년까지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491억 달러를 상회, 이 중에서 교통·통신, 에너지 부문에 전체 금액의 48%인 234억 달러 집중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1년 4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누적액은 3,196억 달러(2만 4,803건)에 달함
- 이 중에서 제조업에 58.4%(1,865억 달러) 투자됨

2.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 및 시사점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주요 국토개발 사례

(교통: 하노이-하이퐁 5번 국도)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상업항인 하이퐁항을 연결하는 기존 도로 개선

- 기존 2차선에서 4~6차선으로 확장·정비되면서 하노이에서 하이퐁 이동시간 3시간 단축, 상업 및 산업 생산 능력 증대, 화물 및 여객 운송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도로 주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 특히 국도변에 신설된 공장으로 농민과 중부 지역 이주민이 유입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지역총생산 증가가 현저히 높음

(전력: 푸미발전소) 지역 간 에너지 부존량 격차와 계절적 편차를 해소하고,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남부 지역의 전력수요에 대비

- 베트남 전력생산량의 11%, 남부 지역 전력생산량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경제발전을 지원
- 전력공급 외에도 발전소 운영과 유지, 송·배전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

(경제특구: 떤투언 수출가공구) 국내·외 투자자금 유치, 수출역량 강화 및 외화수입 확대, 첨단기술 및 관리 경험 습득을 위해 개발

- 21개국 200여 기업에서 17억 달러를 투자하고 6만 5천 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성 이후 2017년 까지 245억 달러를 수출하여 4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함
-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컴퓨터·전자 부품 등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투자기업이 변화되고 있음

(주택: 푸미흥 택지개발) 도이머이 이후 호치민시의 경제적 발전으로 주변 지역 인구가 대거 유입함에 따라 주택공급 부족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남동부 중심의 도시개발 추진

-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에서 혁신을 이루었고, 호치민 남동부 지역을 금융·상업·서비스·산업·과학·문화·교육 등에서 발전시킴
- 푸미흥 개발로 호치민시는 4년 동안 약 7천만 달러(1조 5,323억 동VND)의 재정수입을 확보함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

(항목별) 사례별 개발 배경·과정, 자원조달 및 투자유치, 법령·추진체계, 성과·문제점 등을 종합해 시사점 도출

- (제도 마련) 관련 법령 사전에 제정, 상황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법령 정비, 인프라 개발계획과 지역별 개발 계획의 연계성,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권한 이양과 조정 등이 필요
- (자원조달) 해외자본 유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체계 구축, 국내자본 축적 필요
- (인력 양성) 시장경제체제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인프라별 사업관리 능력과 특화된 기술인력 양성 필요

(개발 시기 측면) 베트남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강조한 국토인프라 개발순위와 실제 개발 시기는 상당한 차이

- (전력·도로) 전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1975년부터, 교통운송 부문은 1986년부터 우선개발을 강조했으나 실제 개발 시기는 1995년부터 추진할 정도로 지연됨
 - 대규모 개발로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서 한계
- (수출가공구) 1992년 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1996년에 손익분기점에 달성할 정도로 단기간 내 개발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고용 및 수출 등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
- (주택공급) 경제발전과 병행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은 해당 지역의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시스템을 완성하는 견인차 역할

3. 베트남 사례의 의미와 남북협력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베트남 사례의 의미

경제체제 전환 유형에서 유사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김정은이 ‘베트남식 모델’을 언급(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미 국무장관의 하노이 발언에서도 북한에 대한 롤 모델(role model)로서 베트남을 언급

-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체제 전환 경로
- 비슷한 시기에 경제체제 전환을 시도했으나 베트남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성공적인 체제 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양국 간 비교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의 경제력은 북한을 추월

남북협력의 필요성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이며, 한 해에 세 차례 개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확산, 잇따라 2019년에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의 필요성

- 남북한 교류협력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한 긴장감과 이질감 해소, 남북한 공동번영,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

4. 남북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남북협력방안

남북협력은 기본원칙 준수, 추진방향과 개발전략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합의, 항목별 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 과거 남북협력 사례, 베트남 성공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4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제도 마련, 자원조달, 인력 양성 측면에서 협력방안 추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인력 양상으로 남북한 신성장 동력과 압축적 경제 성장의 가능성 확보가 중요

표 2 남북협력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협력방안

구 분		주요 내용
기본원칙		
-		• 상호성(相互性): 상호이익 및 공동이익 창출 • 비가역성(非可逆性): 중단과 후퇴 없는 체제 전환 정책 • 비배제성(非排除性): 세계 각국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자연적·사회적·문화적 측면 등 장기적이고 다양한 고려
추진방향		• 수출증대와 외화유입을 위해 경제특구(경제개발구 포함) 중심의 개발 • 특구 내 운영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후 주요도시를 잇는 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적 추진 •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개선으로 노동인구 이동에 대비
개발전략		• 개성, 해주 등 평양과 가깝고 남한과도 인접한 곳에 경제특구를 개발 • 특구에서 북한 내 중심지로의 연결 인프라를 구축 • 개성, 해주 지역 등 특구가 형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사업 • 전력공급 증대를 위해서 초기에는 남한에서의 전력공급과 북한 내 기존 수력, 화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공급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개발
(남북협력방안) 국토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설치		
제도 마련		• 북한 내 각종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남한의 법률정비 • 북한국토종합계획 및 권역별 발전계획을 남북한 공동으로 수립하고 남한의 근거법령 및 부처별 권한 조정
자원 조달		• 해외자본 유치와 국제공적자금 수혜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및 투자자금의 공식적 투자경로 마련 •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방안과 남한의 기술·인력 지원
인력 양성		• 북한 인프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육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인력 육성 • 시장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육성

출처: 연구진 작성.

참고문헌

권숙도, 2012,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4권, 2호: 5-37.
World Bank, 2016, *VIETNAM 2035 Toward Prosperity, Creativity, Equity, and Democracy*, NW, Washington: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2009, 2015-2016, 2017-2018*, 2018, Cologny: World Economic Forum.
Đoàn Văn Minh, 2019, *General Outlin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Hanoi: VIDS.

※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이성수·박태선·김승중·최재성·오호영·허강무·도안반밍·팜티하·응웬당흥, 2020,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이성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jianke@krihs.re.kr, 044-960-0160)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

